

작년 하반기 전북 지역경제 '보합'

한국은행 전북본부 모니터링 결과... 소비·건설 회복·제조업은 소폭 감소

2025년 하반기 전북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와 건설은 살아나는 흐름을 보였지만, 제조업과 수출 일부 품목의 부진이 이어지며 뚜렷한 반등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전북 경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하반기 전북 경기는 생산과 수요 전반에서 큰 변화 없이 '보합' 흐름을 이어갔다.

생산 측면에서는 제조업이 소폭 감소했다. 자동차는 중국과의 가격 경쟁 심화, 일부 생산라인 가동 중단 등의 영향으로 줄었고, 화학제품과 1차 금속도 건설 경기 부진과 글로벌 공급과잉, 전기료 상승 부담 등으로 부진했다. 반면 기계장비는 수출 판로 다변화

에 힘입어 증가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 관광 개발 수요가 늘면서 굴착기 수출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

서비스업은 소비 회복세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정부 소비진작책과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자산 효과가 영향을 줬다. 백화점 리뉴얼 효과, 지역 축제에 따른 관광객 증가 등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건설업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주거용 건축허가와 공업용 착공 물량이 크게 늘었고, 군산·익산의 미분양 물량도 줄어 재고 부담이 완화됐다.

하반기 민간소비는 재화·서비스 모두 증가했다. 자동차와 의류, 레저용품 판매가 늘었고 여행 수요 증가로 연료 판매도 확대됐다. 숙박·음식점, 스포츠·여가 관련 소비도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일부 대기업 생산라인 신설 등으로 소폭 늘었다.

다만 수출은 품목별로 온도 차가 컸다. 정밀화학원료, 동제품, 농약·의약품은 증가했지만 합성수지와 자동차 부품 등은 부진했다. 2025년 전북 누적 수출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64억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이 최대 수출국 지위를 유지했으며, 농기계와 동제품, 철강관 등이 대미 수출을 이끌었다.

고용 사정은 다소 나아졌다. 하반기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천 명 줄었지만, 감소폭은 상반기보다 크게 줄었다. 건설업과 운수·금융업 취업자는 늘었다.

소비자물가는 2.2% 상승해 상반기와 비슷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올랐지

만 공공·외식 서비스 물가 상승폭은 둔화됐다.

주택시장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했고 거래량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주는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군산·익산은 미분양 부담이 남아 있다.

인구는 17만6천 명으로 줄었지만, 순유출 규모는 상반기보다 축소됐다. 전망은 조심스럽다.

2026년 상반기 제조업은 보합, 서비스업은 소폭 증가, 건설업은 보합 수준이 예상된다. 수출은 관세 리스크 완화와 AI·친환경 소재 수요 확대에 힘입어 점진적 개선이 기대된다.

다만 철강 등 일부 업종은 고물 관세 부담이 여전히 변수다.

지역 산업 구조를 미래 유망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수출 품목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상근 기자

"설 차례 안 지낸다" 63.9%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명절 농식품 소비 '평시화' 뚜렷

설 명절에 차례를 지내지 않는 가정이 크게 늘면서 명절 농식품 소비가 과거보다 간소화되고, 구매 규모도 평시 수준에 가까워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 명절 농식품 구매 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설에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3.9%로, 전년보다 12.4%포인트 상승했다. 차례를 지내는 가정 역시 음식 가짓수와 양을 줄이거나 반조리·완제품을 활용하는 등 준비 과정을 간소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조리·완제품은 조리 과정이 복잡한 떡류와 전류 중심으로 구매 의향이 높았다.

설 연휴 기간 귀향 계획이 있는 가정은 47.3%로 절반에 못 미쳤다. 나머지는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게

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휴 중 식사를 집에서 해결하겠다는 응답은 73.5%로, 외식·배달·포장(26.5%)보다 크게 높았다. 이는 지난 추석 대비 가정 내 식사 비중이 소폭 늘어난 수치다. 농식품 구매 장소는 대형마트(46.8%)가 가장 많았고, 전통시장(15.6%), 온라인몰(14.2%)이 뒤를 이었다.

명절 선물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63.7%였다. 이 중 86.7%는 가족·친척에게 줄 선물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균 선물 구매 비용은 6만6천 원으로 조사됐다. 가격대는 3~5만 원대(17.6%)가 가장 많았고, 10만 원(14.8%), 5~7만 원(14.6%), 7~10만 원(13.5%) 순이었다. 선물 품목은 농식품이 77.1%로, 공산품(22.9%)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선물 구매 시기는 명절 1주일 전이 가장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상근 기자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 지원사업 추진

중기부, 해외기술이전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기술 수요 발굴부터 해외 기술이전까지 전 과정을 연계 지원하는 체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2026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지난 27일 공고했다.

이 사업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거래

플랫폼인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 기술 수요 발굴, 중개 및 계약, 해외 기술이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기술거래 성과가 높은 플랫폼을 정책 중심축으로 활용해 지원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취지다.

올해 사업에서는 지원 내용이 일부 확대됐다.

우선 중소기업이 기술 솔루션을 보다 신속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연구소 및 기술군 중심의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이 새롭게 도입된다. 기술 정보를 시각화해 수요기업의 이해도를 높이

고 매칭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해외 기술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신규 추진한다. 기술이전 계약, 현지 시장 진입 전략 등 해외 진출 과정 전반에 대한 전문 지원을 통해 국내 기술의 글로벌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관 공동중개 인센티브와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지원 규모도 예년보다 확대됐다.

중기부는 스마트테크브릿지를 국내 대표 기술거래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고도화도 병행한다. 인공지능

(AI) 기능 강화와 맞춤형 서비스 신설 등을 포함한 차세대 시스템 구축이 목표다.

이를 위해 올해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을 수립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고도화에 착수해 2027년 말 출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영호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스마트테크브릿지를 중심으로 기술거래 지원 체계를 고도화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접근성을 높이고, 기술이 실제 사업화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한 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스마트테크브릿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김병석 원장은 지난 27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본원에서 '식량작물 현장 전문가 연람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농촌진흥청, 정부업무평가 '역점정책·정부혁신' 2관왕

농촌진흥청이 국민주관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정부업무평가에서 두 개 부문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농촌진흥청은 국무조정실이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역점정책'과 '정부혁신'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역점정책, 규제 합리화, 정부혁신, 정책 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농촌진흥청은 역점정책 부문에서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 혁신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AI 기반 기술을 농업 현장에 적용해 농식품산업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밀착형 기술 보급과 국제협력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K-농업 실현에 기여한 점이 주요 성과로 인정됐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AI 기반 모돈 체형 관리 자동화 기술이 대표 사례로 꼽혔다. 해당 기술은 고품 축산인의 노동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며 현장 체감도가 높은 혁신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첨단기술을 농업 전반에 접목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확대하고, 국가 국정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농업·농촌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농식품부, '영농도우미' 사업 지원 범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 유지를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범위를 2026년부터 넓힌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제도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 농업인 가운데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일정 기간 영농이 어려운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농업인,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 중인 농업인 등이다. 대체 인력 인건비 8만4,000원 중 70%를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농업인 고령화와 높은 유병률을 고려할 때 현장 수요가 큰 안전장 제도로 평가된다.

농식품부는 2026년부터 지원 대상을 추가로 확대한다. 농업인이 자녀의 사고·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또 농업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오상근 기자

국립식량과학원, 식량작물 현장 전문가들과 협력 강화 나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식량작물 재배 현장의 목소리를 연구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섰다.

국립식량과학원 김병석 원장은 지난 27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본원에서 '식량작물 현장 전문가 연람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고, 연구 성과 확산과 현장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자리는 현장 전문가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실용 연구 중심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량작물 현장 전문가 연람회는 지난 2013년 12월 설립된 조직으로, 벼·특수미·보리 등 13개 품목에서 활동하는 3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국립식량과학원의 연구 성

과를 농업 현장에 신속히 보급하고, 재배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 의견을 연구진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연람회 임원진은 대부분 영농 경력 30년 이상의 베테랑 농업인들로, 국립식량과학원 현장명예연구관으로 활동하며 신품종 현장 실증과 재배 기술 확산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2026년도 연람회 연선회 일정과 주요 회의 인건 수립, 연람회 운영 방향 등 장기 운영 계획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참석자들은 현장 중심의 실증 시험 확대와 기술 공유 활성화, 교육 및 기술 지원 연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냈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